수도요금 폭탄에 멍드는 학교 재정

광주 초·중·고 378곳 3년간 180억원…재정 압박 가중

1㎥당 1100원 목욕탕보다 비싸…교육용 할인 요구 市 난색

광주지역 초·중·고교 수도 요금이 학교 운영비를 크게 잠식하면서 재정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의 수도요금이 '일반용'으로 분류돼 일부 학교의 경우 한 달 평균 600만원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도요금 체계상 일반용은 카페·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요금이다.

특히 시민 대상 학교 개방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누진제 최고 단계를 적용받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교육용 수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역 초·중·고교 378곳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179억835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58억6220만원 ▲2015년 59억8930만원 ▲지난해 61억3190만원 등으로, 해마다 요금 부과액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에서 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도요금을 부과받은 학교는 정광고와 조대부고로, 각각 7380만원과 7190만원이었다. 해당 학교는 각각 월 평균 615만원과 599만원의 수도요금을 낸 셈이다.

현재 학교 수도요금은 광주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에 가정용·욕탕용·일반용·산업용 등 업종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용요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1~4단계의 누진제를 적용받은 학교는 일반용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각 업종별 최고단계 기준 1㎥당 수도사용 요금은 가정용(700원)·욕탕용(660원)·산업용(640원)·일반용·학교용(1100원)이다. 최저단계인 1단계 기준 1㎥당 요금을 적용하면 가정용(500원)·욕탕용(570원)·산업용(580원)·일반용(630원)·학교용(580원)이다.

학교가 저렴한 요금을 받는 등 혜택 수요자처럼 보이지만 지역 378개교 수도요금 평균사용량은 각 학교당 440㎥로, 1단계 적용 학교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최고단계(101㎥ 이상)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기관인 학교의 수도요금이 일반 음식점·커피숍 등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시설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보다 20~25%정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최근 시교육청은 교육용 수도요금제를 신설해 요금을 인하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의회에 협조를 건의했으나, 광주시가 적자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전면실시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공익성을 가진 학교에 대중탕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 교육용이 신설되면서 각 학교당 800만원의 인하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년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이 시행되면 뺑소니 운전자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가 활용돼 검거율이 90%를 넘기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

떨어지는 가을… 7일 광주시 북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형광색 조끼를 착용한 채 북구 삼각동 인근 가로수길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 담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고3 담임 10명 중 1명은 신입교사

5년차 미만 12.54%…입시 전문성 부족 진학지도 한계 우려

광주지역 고3 담임 교사 10명 중 1명 이상은 경력 5년차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지도 경험이 적은 교사의 경우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경력 교사들에 비해 진로·진학지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광주일보가 광주시의회 문상필(더불어민주당·북구 3)에게 의뢰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광주지역 고교 3학년 담임교사 교육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고3 담임 교사 598명(67개교 전체) 중 5년 미만 교사는 12.54%인 75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23명 중 5년~10년차는 168명, 10년~20년은 205명, 20년 이상은 150명 등이다. 5년차 미만 교육 경력별로는 ▲1년~2년 1명(1.33%) ▲2년~3년 19명(25.33%) ▲3년~4년 21명(28%) ▲4년~5년 34명(45.33%) 등이다. 국·공립과 사립고교 5년 미만 신입교사 배치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고3 담임 교사 중 사립고 교사 수는 390명인데, 이중 5년 미만 교사는 12.82%인 50명이었으며 국·공립은 전체 208명 중 12.02%인 25명이었다.

고3 담임 교사의 경우 학생 맞춤식 입시지도 등 진로·진학지도에 필요한 상당한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이를 맡기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 67개교 중 37.31%인 25개교는 5년 미만의 교사에게 고3 담임을 맡기지 않고 있다. 일부 학교는 고3 담임 교사를 배치할 때 입시 전문성 등을 감안해 최소 6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지도를 맡기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오늘의 날씨

해뜸 07:00 해짐 17:32 달뜸 21:30 달짐 11:00

만추

흐리고 비가 오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비온뒤갬	14/18	보 성	비온뒤갬	11/18
목 포	흐린뒤맑음	14/17	순 천	비온뒤갬	14/19
여 수	비온뒤갬	16/19	영 광	흐린뒤맑음	12/18
나 주	비온뒤갬	11/18	진 도	흐린뒤맑음	15/16
완 도	비온뒤갬	14/19	전 주	비온뒤갬	14/18
구 례	비온뒤갬	12/18	군 산	비온뒤갬	12/17
강 진	비온뒤갬	13/20	남 원	비온뒤갬	12/18
해 남	비온뒤갬	11/19	흑산도	흐린뒤맑음	13/16
장 성	비온뒤갬	12/1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2.0	북서~북	1.0~2.5
	먼바다	서~북서	1.0~2.5	북서~북	1.5~3.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	북서~북	0.5~1.0
	먼바다(동)	서~북서	1.0~2.5	북서~북	1.0~2.
	먼바다(서)	남서~서	1.0~2.0	북서~북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49	04:42
	22:30	17:20
여수	05:18	11:57
	17:58	--:--

◇ **생활지수**

산불위험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한때 나쁨

◇ **주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5/18	7/18	5/14	3/15	6/17	6/14	4/12

"조선대 임시이사 자격은 적폐 청산 인사"

범대위, 대자협 대표 등 18명 후보 명단 교육부에 전달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앞둔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부에 임시이사의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조선대 구성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 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부가 임명하게 될 임시이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와함께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으로 축적된 대학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범대위는 최근 시민사회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 18명의 임시이사 후보 명단을 교육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들 후보에는 대자협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범대위·총동창회·공익형 이사 후보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조선대 구성원과 광주·전남지역 여론을 수렴해 이달 말께 9명의 임시이사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립대인 대학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범대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학교 급식에 유전자변형 두부 납품

올 8건 검출…정량검사는 적합

전남지역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GMO) 콩이 섞인 두부가 사용된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7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GMO 검사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전남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21건과 일반 유통식품 22건을 검사한 결과, 8건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 모두 두부였다. 이 중 1건은 여수지역 한 학교의 급식 재료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은 경기지역 제조업체가 했다.

문제는 GMO 함유 두부의 학교급식 납품 사실이 샘플 검사에서 드러난 것이어서 실제 GMO 함유 제품의 유통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정량검사 결과 표시 기준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